

# 이주상태(migration status)별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제언: 조사통계를 중심으로<sup>1)</sup>

박효민<sup>2)</sup> · 박영실<sup>3)</sup> · 김월화<sup>4)</sup> · 이영미<sup>5)</sup>

## 요약

데이터 세분화(data disaggregation)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no one left behind)’는 포용성 원칙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인 동시에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다. 데이터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범주가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수집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 승인 조사통계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이주상태 항목의 표준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사에서 이주상태 질문의 포함 여부, 질문 방법과 응답범주 제시 방식, 결과표 제시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많은 조사에서 이주상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고 질문 방법이나 응답범주 제시 방식, 결과 보고 방식도 표준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상태 항목의 표준화 방안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데이터 세분화, 항목표준화, 이주상태, 이주배경

## 1. 서론

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20세기 들어 크게 늘어났고 21세기에 보다 가속화되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이주 인구는 약 2억 5800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2000년의 1억 7300만 명보다 약 8500만 명 늘어난 수치이고 50년 전인 1965년의 7500만 명과 비교해서는 3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United Nations, 2017).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17). 이주민의 유입은 정착 국가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부족한 노동력이나 기술을 공급하며 원 거주 국가와 정착 국가 간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Hirschman 2013). 동시에 사회 구성원 사이의 문화적 마찰, 사회적 불평등, 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장준오, 2002; 설동훈 외, 2002). 특히 세계 곳곳의 많은 이주민들은 이들의 언어, 외모, 문화, 직업, 체류 지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에서 내국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와 같은 이주민의 열악한

1)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 세분화와 항목 표준화 연구(박영실 외, 2017a)”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2) 주저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연구원. E-mail: hyominp@gmail.com

3) 교신저자.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사무관. E-mail: youngshil@korea.kr

4)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E-mail: kimworlhwa@hanmail.net

5)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주무관. E-mail: lym0929@korea.kr

지위는 이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종종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박효민 외, 2016; 최영신 외, 2012). 따라서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인도주의적 측면뿐 아니라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국제 사회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은 지난 2015년 9월 제70차 총회에서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세계를 이끌어 갈 인류의 정책적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2015년까지 진행되어 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대상과 목표를 확장하였다. 기존의 MDGs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8개 목표(goals)와 21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평화와 안보 등에 관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다.<sup>6)</sup> 이러한 세부목표의 달성 정도는 지표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빈곤 종식이라는 목표 하에 구성된 첫 번째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하루 평균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인구를 종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 지표로는 국제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을 이용하게 된다. 이처럼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지표 생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SDGs의 169개 세부목표 중 이주와 관련된 세부목표는 10개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세부목표는 '계획적이고 잘 운영되는 이주정책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을 촉진(facilitate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6) SDGs 글로벌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영실 외(2017b)를 참고할 것. 한편,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 종식(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과 농업 증진(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3. 보건 및 웰빙 증진(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ges),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증진(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역량 강화(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6.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리(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7. 에너지 접근 보장(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8.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증진(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9.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와 혁신 증진(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10. 불평등 감소(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13. 기후변화 대응(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14. 해양생태계 보호(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5. 육상생태계 보호(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16.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17.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하는 것이다. 이주는 이렇게 특정 세부목표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분야(cross-cutting)적 의제로도 다루어지고 있다. SDGs는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기 위해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no one left behind)’는 포용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쉽게 ‘뒤처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집단 중 하나가 바로 이주민이다. 따라서 이주상태에 따라 데이터를 세분화(data disaggregation)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론과 통계학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예를 들어, 취약집단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 수치를 얻으려면 표본 규모를 확대하고 동시에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 수집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조사항목을 추가 혹은 개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행정자료 등의 보조 정보를 활용한 간접추정 기법을 적용하여 소지역 단위의 통계치를 생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위 인구집단 세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통계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세분화되는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UN통계위원회는 지표 프레임워크를 관통하는 데이터 세분화를 위해서는 범주의 표준화(harmonization of the categories)<sup>7)</sup> 작업이 필요하고 모든 지표는 표준화된 범주를 기반으로 세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UNSC, 2017).

이 연구에서는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세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데이터 세분화의 한 사례로 한국의 이주 관련 조사통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상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측정되고 결과표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데이터 세분화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를 통해 이주상태 측정 항목의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하여 조사가 개선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주상태에 따른 세분화된 데이터가 이주민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유사한 용어로 standardization이 있다. Fuerters(2008)에 따르면 standardization은 모든 변이를 제거하는 것을, harmonization은 변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Richen과 Steinhorst(2005)는 standardization은 다양한 지역 혹은 부서 간에 경영 프로세스를 엄격하게 일원화(uniform) 시키는 것을, harmonization은 표준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에서의 차이를 제거하여 프로세스 표준 사이의 변이 정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단일의 기준이 적용되는 standardization에 비해 harmonization에 좀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harmonization에 대한 적합한 번역어가 없어 이 글에서는 표준화로 번역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준화는 harmonization을 의미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 2. 데이터 세분화의 의미

SDGs 채택 문서인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2030의제)」에서는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는 협력을 통해 동 계획을 이행하되 인류의 빈곤 탈피 및 지구의 치유와 보호를 추구하고 세계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길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과감하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UN 2015, p. 3)’을 약속하고 있다. 이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세분화이다.

데이터 세분화란 자료 수집 대상을 좀 더 세부적인 차원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성, 연령, 장애 등은 차원(dimension)으로, 한 차원 내의 하위 특성에 따른 구분은 범주(category)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성별은 차원이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특성은 범주이다(IAEG-SDGs, 2016). SDGs에서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적절하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별도의 세부목표<sup>8)</sup>로 설정할 만큼 데이터 세분화는 2030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세분화는 단순한 자료 수집 기법의 변화를 넘어 통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공식 통계가 갖추어야 하는 원칙으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품질, 시의성, 신뢰성 등과 함께 세분화가 대두된 데에는 통계의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세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그동안 통계에 숨겨져 있던(hidden) 집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visible)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집단을 비교하고 특정 집단의 불평등 혹은 차별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 정보는 사회적 약자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노동 관련 조사에서 실업 여부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료 외에 이들 요인의 선행요인이 되는 장애나 건강 상태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가 수집된다면 보다 면밀한 정보 수집과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나 교육수준을 넘어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주배경 등의 요인들로 세분화된 자료들이 수집된다면 보다 정확한 정책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MDGs에서 내세웠던 목표의 대부분이 국가 수준의 평균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통계에서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실제의 현상을 평균으로 숨겨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UN, 2015; DIHR, 2016).

데이터 세분화의 움직임은 특정 지표에 한정되지 않는다. <표 2.1>은 SDGs 지표<sup>9)</sup>에

8) 이 세부목표의 영문은 다음과 같다: By 2020, enhance capacity-buil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ata disaggregated by income, gender, age, race, ethnicity, migratory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

9) SDGs 지표는 2017년 3월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총회에서 의결된 A/RES/71/313에 의해 내용이 수정되었고 지표의 수도 232개로 변경되었으나, 본 연구는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230개 지

서 요구되는 세분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이에 따르면 세분화는 여러 변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성과 연령별 세분화를 요구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 지역, 소득, 이주상태 순으로 세분화 요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고용상태, 산업 등에 따른 세분화 역시 요구되고 있다.

〈표 2.1〉 SDGs 글로벌 지표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세분화 현황(2016년 3월 기준)

구분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장애	지역	기타	합계
목표 1	2	6	4	.	.	.	1	1	5	19
목표 2	.	1	.	.	.	.	.	.	3	4
목표 3	.	1	2	.	.	.	.	.	1	4
목표 4	1	6	4	.	.	.	1	1	5	18
목표 5	.	3	4	.	.	.	.	.	4	11
목표 6										
목표 7										
목표 8	.	7	3	.	.	2	2	.	1	15
목표 9									2	2
목표 10		1	1				1			3
목표 11	.	3	3	.	.	.	3	1	5	15
목표 12									1	1
목표 13										
목표 14										
목표 15										
목표 16	.	7	7	.	.	.	2	.	4	20
목표 17									4	4
합계	3	35	28			2	10	3	35	116

지표에 명시적인 세분화 요구가 없더라도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 지표는 ‘청소년’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하위 집단별로 지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을 다루고 있는 목표 5의 경우 지표의 상당수가 직접적으로 이미 성별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여성의 비율,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등은 필수적으로 성 세분화가 필요하다.

표를 포함한 A/RES/70/1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10) 목표 1~17의 내용은 각주 1을 참고할 것.

현 지표에는 세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세분화가 필요한 지표도 있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연령 등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Lindquist and Duke, 1982 등). 그러나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은 여성이나 노년층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높다는 ‘범죄 피해 두려움 패러독스(victimization-fear paradox)’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 두려움 지표에는 세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살률도 마찬가지다. 성, 혼인상태, 지역 등에 따라 자살률이 차별적이라는 사실도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 자살률 지표의 세분화도 필요하다(WHO, 2017). 이 외에 국가별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세분화가 가능한 변수도 있다. 실제 많은 지표는 데이터를 고용상태별로 세분화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종교, 소수자, 난민, 노숙자, 수용자, 슬럼 거주자, 거리청소년 등의 범주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Fasel, 2016).

데이터 세분화는 세분화 방법의 발전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Hancioglu(2016)는 왜곡된 추정 최소화를 위한 데이터 세분화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론적 업무를 지식 발전 정도에 따라 기존의 세분화 항목과 이에 대비되는 새로운 세분화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세분화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인종, 장애, 이주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세분화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분화의 표준(standards), 측정도구(measurement tools), 규정(protocols)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Victora, 2016).<sup>11)</sup> 예를 들면,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각국의 자살률을 세분화하여 비교할 때 연령과 소득 구간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항목들이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측정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의 지리적-문화적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단일 국가, 단일 지역, 단일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줄어들고 공통 조사표를 이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sup>12)</sup> 일명 3M(Multi-national, Multi-regional, Multi-cultural)으로 지칭되는 범문화권(cross-cultural) 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별 국가의 통계 전략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일지라도 그 결과가 국제적으로 비교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통계의 기본이 되는 센서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행되는데, 이에 대해 UN은 인구, 가구, 주택 분야 핵심(core) 항목을 선정하여 해당 항목을 반드시 질문할 것을 권고하고 많은 국가가 이 권고를 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력조사나 생활시간조사와 같이 국가통계로 작성되는 상당수의 자료가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표준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문화 조사에서의 관건은 ‘비교 가능성’이며, 이에 따라 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Granda and Blasczyk, 2016).

표준화의 개념은 범문화 조사를 통한 국가 간 비교뿐 아니라 국가 내 다양한 조사의 비교

11) 반면 기존의 세분화의 대표적인 예는 성이나 연령, 주거 등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측정이 수월하며 모든 사회과학 분석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표준화 수준 역시 높은 편이어서 세분화를 통한 하위 인구집단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자료의 품질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2) 대표적인 국제조사사업으로 World Value Survey, European Social Survey,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등이 있다.

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항목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조사에 공통으로 묻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방식이 달라서 이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목 표준화를 통해 개념, 측정 방법,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조사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 정도를 측정·평가하는 SDGs는 ‘표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국가에서 생산되는 SDGs 지표가 국가 간 수준에서 비교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제공된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동일한 개념과 측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지표가 동일한 수준의 표준화를 이룰 수는 없다. 출생이나 혼인 관련 통계는 집계되는 지역의 법률, 관습, 자료 수집 방법이 달라도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국제인구이동이나 이주상태와 같은 통계는 표준화된 집계가 어렵다. 국제인구이동의 경우 국제이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측정 기준이 다양하여 국제적인 표준화가 불가능하거나 표준화가 가능하더라도 최소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Granda and Blasczyk,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 표준화는 SDGs 이행의 평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항목 표준화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국가는 거의 없다. 국가 간 항목 표준화는 물론이고 국가 내 항목 표준화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같이 각 부처가 통계 자료를 직접 수집·관리하는 분산형 통계 체계를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영국 통계청은 항목 표준화 과정에서 조정된 질문이 서로 다른 조사에 잘 들어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 조사 부서에 강조하고 있다. 항목 표준화를 위해 응답범주를 더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세부적인 응답범주가 응답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보다 명확한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ONS, 2016).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SDGs 데이터의 세분화 기준이 되는 항목 중 새로운 세분화가 요구되는 이주상태 항목의 표준화 수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상태는 국제적으로도 새로이 부각되는 항목이면서도 각 국가의 법과 문화를 고려하여 국가 간 이주의 기준을 맞추어야 하므로 표준화가 상당히 어려운 항목이다. 한국 역시 이주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각종 사회조사에서 이주 변수가 다루어지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 연구는 2016년 5월 기준 국가승인조사 중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33종의 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조사에 포함된 이주상태 항목의 질문 방식과 결과표 제공 형태 등을 비교하였다.<sup>13)</sup> 우선 조사표 검토를 통해 질문문항과 응답범주를 비교하였으며,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이하 KOSIS)에 보고된 형태를 파

13)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성 중인 기본통계와 지역사회조사는 제외하였다. 이 조사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악하여 통계표 제시 방식을 비교하였다. 133종의 조사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분야는 사회(30종, 22.4%), 복지(18종, 13.4%), 문화(14종, 10.5%), 보건(13종, 9.7%), 고용(11종, 8.2%), 교육(10종, 7.5%)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표 3.1〉 분석 대상 조사의 주제 영역별 구성 비율

영역	빈도	비율(%)
가계소비(소득)	6	4.5
경기	1	0.8
고용	11	8.3
교육	10	7.5
교통	2	1.5
금융	1	0.8
기업경영	1	0.8
농림	8	6.0
문화	14	10.5
보건	13	9.8
복지	18	13.5
사회	30	22.6
에너지	1	0.8
인구	3	2.3
정보통신	8	6.0
주택	3	2.3
환경	1	0.8
기타	2	1.5
합 계	133	100.0

우선 총 133종의 조사 중 이주상태 항목이 포함된 조사는 28종이다.<sup>14)</sup> 〈표 3.2〉을 보면 이들 조사는 주로 농림(5종), 교육·사회·보건·복지(각 4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김천시, 인제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는 3종의 조사를 제외하면 모두 전국 단위의 조사이다.

14) 2016년 5월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므로 이후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



〈표 3.2〉 이주상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 목록

구분	분야	통계작성기관	작성주기	공표지역
국내신규석·박사학위취득자조사	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반기	전국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사회	여성가족부	3년	전국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사회	한국형상정책연구원	2년	전국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사회	여성가족부	3년	전국
근로환경조사	보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년	시도
김천시농업조사	농림	김천시	5년	시군구
농가경제조사	가계소비	농가경제조사	1년	전국
농림어업조사	농림	통계청	1년	시도
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농림	농촌진흥청	1년	전국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교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년	전국
박사인력활동조사	교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복지	보건복지부	3년	전국
복지욕구조사	복지	보건복지부	3년	기타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5년	시도
외국인고용조사	고용	통계청	1년	전국
인구동향조사	인구	통계청	월	시도
인구총조사	인구	통계청	5년	읍면동
인제군농림어업조사	농림	인제군	5년	읍면동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정보통신	미래창조과학부	1년	전국
장애인실태조사	복지	보건복지부	3년	전국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사회	여성가족부	3년	시도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전국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정보격차	미래창조과학부	1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사회	제주특별자치도	1년	시군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건	보건복지부	1년	시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년	전국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교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년	전국
한국의료패널조사	보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 민건강보험공단	1년	전국

UN의 SDGs에서는 응답자의 이주 배경뿐 아니라 인종, 민족, 국가 등에 따른 세분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 배경이 인종이나 민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는 아시아 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계라면 이주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족 구분과 관련해서도 재중동포(조선족)를 제외하고는 이주 배경과 민족적 특성이 중첩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인종이나 민족 구분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이주상태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4. 분석 결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부 승인통계 중에서 이주상태를 묻고 있는 조사는 28종에 불과하다. <표 4.1>에 제시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보면 이 수가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 있다. 성, 연령은 분석 대상 133종의 조사 중 여성이나 청소년 등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 조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조사(130종, 97.7%)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수준(110종, 82.7%)과 소득(105종, 78.9%) 역시 대부분의 조사에서 질문되고 있다. 반면 장애(31종, 23.3%)와 이주상태(28종, 21.1%) 항목은 일부의 조사에만 포함되어 있다. 조사 항목이 해당 시점의 사회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면,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나 이주 문제가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4.1> 주요 인구학적 특성 항목이 포함된 조사 비율

항목	빈도	비율(%)
성	130	97.7
연령	130	97.7
교육수준	110	82.7
소득	105	78.9
혼인상태	90	67.7
점유형태	56	42.1
장애	31	23.3
이주상태	28	21.1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한국 내 이주민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많은 연구에서 그 수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내 이주민은 거주지나 직업 등에서 한국인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주 여부가 사회계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주에 대한 문항이 이주민의 삶의 경험을 넘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찍이 이주민을 수용했던 국가들에서 이주민과 원주민 간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분화되고 사회갈등이 심화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이주 관련 질문의 중요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주상태 항목을 포함하는 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측정 방법의 표준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1 질문 방식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조사표에 나타난 질문 방식이다. 현재 국제이동에 대해 국제기구 간 표준화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이주의 양상이나 의미가 각 사회의 문화적 혹은 제도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항목들의 공통점은 추출해 낼 수 있다. OECD나 EU 등이 국제이주 통계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념은 국적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외국인(foreign population people)과 외국인 개념을 확장하여 귀화한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해외출생인구(foreign born population)이다. 이에 따르면 국적과 출생지가 이주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최근에는 이주 2세대의 사회통합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를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정기선·김혜진, 2015). 이러한 범주를 모두 합쳐 이주배경인구(the population with a migration background)로 규정한다.

이에 대응하는 항목으로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족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민 혹은 귀화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데, 그 측정 항목은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조사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이 항목은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귀화하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처럼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급한 이주배경인구와 관련이 깊다. 엄밀히 말해 이주배경을 측정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포괄적 이주민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조사들을 분석한 <표 4.2>를 보면 이주배경을 묻고 있는 28종의 조사 중 국적만을 묻는 경우는 13종, 출생국가를 묻는 경우는 4종이다. 그러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구분에 따른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단순하게 국적이나 출생국가 중 어느 하나를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이주상태를 구별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국적자가 해외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출신국가가 외국으로 표기되어 조사표 상으로는 이를 이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 자녀가 이주배경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속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국적법으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의 국적에 따라 계속해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경우 이주 경험이 없다고 측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부모 세대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주배경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이주 여부와 출신국가 등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분석 대상 조사 중 13종의 조사는 국적만 질문하였고 다문화 여부를 묻는 경우가 6종, 출생국가를 직접 묻는 조사가 4종이었으며 국적 및 출생국가를 모두 묻는 경우는 3종에 불과하여 보다 정교한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 이주상태 측정 내용별 조사 종수

측정 내용	빈도
국적	13
출생국가	4
다문화	6
국적+출생국가	3
국적+다문화	2
합계	28

질문문항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항목 측정의 세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질문문항은 조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가족, 가정, 가구의 표현이나 출생, 출신의 표현이 일관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 4.3〉 참조).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이외에 새터민 등을 포함한 다거나 다문화가족 여부를 응답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특수한 형태의 질문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질문은 이주배경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이주 여부를 측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주 역사가 짧아 세밀한 측정 방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5) 여기에 해당하는 조사로는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보육실태조사, 복지욕구조사, 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가 있다.

〈표 4.3〉 이주상태 질문문항

구분	
출생국	귀하가 태어난 곳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귀하의 출생국가는 어디입니까?
	귀하와 배우자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신국가를 적어주세요.
	아버지/어머니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국적	국적은?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출생 시 국적과 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모국이 다른 나라(외국)입니까?
	귀하는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민자입니까?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다문화	다문화가족/다문화가구
	귀하는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민입니까?
	아동의 현재 부모는 결혼 이주민(다문화)입니까?
	아동의 부모가 이민자인 경우 어디 출신입니까?
	아버지/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어머니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학생은 외국인주민 자녀입니까? '이 학생'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한편 한국 이주민 중 다수는 결혼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주배경이 있는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이며, 이들의 자녀 중에는 이주한 부모의 출신국에서 태어나 중도 입국을 통해 이주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부모 중 어느 한쪽 혹은 양 부모가 모두 이주배경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한국인 가정의 자녀와 사회화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이주배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주민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주 관련 논의에서 거론되는 '이주배경 아동' 혹은 '이주배경 청소년'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어 직접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점차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사 항목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부모의 이주배경을 통한 아동의 이주배경을 〈표 4.4〉와 같이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에서는 결혼이주 여부 및 부모의 출신국을 상세하게 물어보

고 있으며 보기에 제시된 출신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방형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분화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표준화의 참고 사례로 고려할 만하다.

〈표 4.4〉 이주배경 항목 측정 사례: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의 현재 부모는 결혼 이주민(다문화)입니까?		
1) 결혼이주민	2) 한국인	8) 비해당 (부재)
아동의 부모가 이주민인 경우 어디 출신입니까?		
1) 중국 (조선족, 한족)	2) 베트남	3) 일본
4) 필리핀	5) 몽골	6) 캄보디아
7)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가	8) 기타	88) 비해당

이주민의 출생국적은 개방형으로 질문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이주민의 주요 출신국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 폐쇄형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폐쇄형 질문의 경우 자료 처리는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방식은 수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심각한 배제나 차별을 겪는 집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는 많지 않으나 점차 증가하는 집단에 대한 추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신국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응답 방식이나 개방형과 폐쇄형이 함께 제시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표 4.5〉 이주상태 응답범주 형태별 조사 종수

구분	빈도
이분형(예/아니오, 있음/없음)	11
이분형+폐쇄형 선택지	2
이분형+개방형 선택지	5
폐쇄형	12
개방형	3
합계	33

\* 주) 이주상태에 대해 두 가지(국적+출생국가, 국적+다문화)로 질문한 경우 각각의 응답범주 유형을 집계함

출신국에 대한 응답범주는 이주민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 순으로 제시되는데, 해당 조사의 주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응답범주의 내용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표 4.6〉과 같은 순서로 응답범주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자 통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6〉 이주배경 응답범주 제시 순서

1) 중국 (조선족, 한족)	2) 베트남	3) 일본
4) 필리핀	5) 몽골	6) 캄보디아
7)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	8) 기타	88) 비해당

특이한 점은 전국 단위 조사가 아닌 지역 단위 조사(김천시 농업조사, 인제군 농림어업조사)에서 〈표 4.7〉과 같이 국적과 이주배경 항목이 세분화되고 표준화되어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혼이주자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응답범주는 국내 이주자의 출신국가별 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이들 조사에서는 이주배경이 있는 경우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언제인지도 묻고 있다.

〈표 4.7〉 지역 단위 조사의 이주배경 응답범주 제시 순서

1) 대한민국	2) 베트남	3) 중국(한족 등)
4) 중국(조선족)	5) 필리핀	6) 태국
7) 인도네시아	8) 스리랑카	9) 우즈베키스탄
10) 일본	11) 몽골	12) 캄보디아
13) 미국	14) 네팔	15) 방글라데시
16) 파키스탄	17) 러시아	18) 대만
19) 미얀마	20) 캐나다	21) 이외의 국가

## 4.2 결과표 제공 형태

다음으로 통계 결과표를 살펴보았다. 〈표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선 결과표 제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출신국’, ‘출신국가별’, ‘출생 시 국적’, ‘다문화가구 여부’, ‘국적’, ‘국적별’, ‘거주지별’ 등으로 결과표의 제목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표의 명칭은 조사의 목적과 결과표의 제공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의 표준화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었지만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단순히 이주배경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적, 민족, 문화권 등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우선 이주배경에 대한 결과표는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였는지, 귀화하였는지, 외국인인지 여부로 구분하거나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라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한쪽만 외국인인 경우, 양친이 모두 한국인인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신지역 정보의 제공은 크게 대륙별로 구분하는 방식과 대륙별로 구분하되 특별히 아시아의 경우만 국가별로 구분하는 방식,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나열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출신지역 정보 제공 방식은 조사의 목적과 특성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가 먼저 제시된다. 특히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등이 대부분의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4.8〉 이주상태 항목 결과표 제공 형태

범주	국적 (민족 및 출신지역 포함)		
이주 배경 여부	<b>국적</b>		
	한국(출생)	한국(귀화 등)	외국
	<b>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 및 추이 구분</b>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 부모
대륙별	<b>거주지별</b>		
	일본권 동남아시아권	중국권 북미권	중화권 기타
대륙 / 아시아 중심 국가별	<b>국적별</b>		
	아시아 한국계 중국인 우즈베키스탄 일본 기타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중국(한국계 제외)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b>출신 국적</b>		
	중국 대만/홍콩 그 외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중국(한국계) 베트남 미주/유럽/대양주	일본 필리핀 기타
아시아 중심 국가별	<b>출신국</b>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기타 나라
	<b>어머니 출신국가별</b>		
	한국 베트남 태국	중국(한족 등) 필리핀 기타	일본 중국(조선족)



전 세계 국가별	<b>출생 시 외국 국적</b>		
	베트남	중국(한족 등)	중국(조선족)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일본
	몽골	캄보디아	미국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러시아	대만	미얀마
	캐나다	이외 국가	
	<b>혼인</b>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대만(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네팔	
	미국(미합중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기타 및 미상	

〈표 4.9〉는 결과표에서 이주상태의 범주를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다문화가구 여부(다문화농가 여부, 다문화어가 여부 등)별, 출생지별, 그리고 국적별 보고 방식 등이 포함된다. 출생지를 제시하는 결과표의 경우 한국 출생자가 아니면 이주배경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출생지에 의한 구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밖에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 여부를 보고하는 방식과 한국인 중 출생 시 한국인이었는지 귀화하였는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결과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주배경과 이주상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서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세분화된 결과표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세한 조사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응답자 자신의 국적 및 출생지와 현 거주지는 물론이고 부모의 출신지와 국적, 현 거주지 등 이주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도 이주배경에 대한 표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수집, 보고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주요국의 이주 관련 항목 표준화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4.9〉 이주상태 항목 결과표 제공 형태: 다문화

이주상태	
<b>다문화가구 여부</b>	
그렇다	아니다
<b>다문화농가 및 농가인구</b>	
다문화농가(가구)	다문화농가 인구(명)
<b>다문화어가 및 어가인구</b>	
다문화어가(가구)	다문화어가 인구(명)
<b>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추이</b>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b>출생지별</b>	
한국	외국
<b>결혼이주민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b>	
한국 국적 있음	한국 국적 없음
<b>유형별</b>	
한국인(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귀화기준)	

### 5. 이주상태 항목 세분화의 국제 동향

이주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은 한 국가 내에서 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이주의 역사와 방향, 이주민의 수,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 이주에 대한 법제도 등이 국가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주 관련 항목 표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개별 조사마다 이주상태 측정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자국의 통계청을 통해 표준화된 측정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호주의 경우 이주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유관 항목으로 본인 및 부모의 출생국가, 호주시민권 취득 여부, 입국연도 등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출생국가 항목은 한국의 여러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생국가 항목과 유사하다. 한국과의 차이는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질문 표준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출생국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세 모듈(detailed question module)의 질문을 취하면 된다. 이 모듈은 출생국가를 국가별로 제시하고 어느 국가 출신인지를 응답하게 하는 폐쇄형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축약모듈(short question module)은 호주와 기타 국가의 이분형으로 묻되 기타 국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소모듈(minimum question module)은 호주와 호주 이외의 이분형으로만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ABS, 2015).

〈표 5.1〉 출생국가에 대한 표준 질문 유형: 호주 통계청

유형	상세모듈	축약모듈	최소모듈
질문	In which country(were you)(was the person)(Was name) born?		
응답범주	Australia England New Zealand India Italy Vietnam Philippines South Africa Scotland Malaysia Other -Please specify_____	Australia Other -Please specify_____	Australia Other country

캐나다 통계청의 경우 구체적인 질문 유형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이주상태를 비이주민(non-immigrant), 이주민(immigrant), 비영주자(non-permanent resident)의 3개 범주로 분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비이주민은 출생 시부터 캐나다 국적을 소유한 자를, 이주민은 캐나다에서 출생하지 않았지만 이민지위 혹은 영주권을 소유한 자를, 그리고 비영주자는 다른 국가로부터 근로 또는 학업, 난민지위 인정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를 뜻한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이주상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사례는 한국의 이주 항목 표준화 논의에 참고할 만하다.

캐나다 사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주상태와 연관된 항목으로 세대지위의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이민 1세대는 캐나다가 아닌 곳에서 출생한 경우로 여기에는 대부분의 이주민이 포함된다. 이민 2세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캐나다인인 경우로 이주민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민 3세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부모 모두 캐나다인이지만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캐나다인 기준이 아닌 이주민 기준의 분류체제로 최근 이주민의 범위를 2세대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참고할 만하다.

한편, 영국에서는 이민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이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인종집단(ethnic group)을 측정하는 항목이 이주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항목인데, 이 항목은 출생국가, 국적,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피부색, 출신지역, 종교 등과 같은 복합적인 항목이 결합되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4개 권역(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별로 항목의 예시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국적을 묻는 질문에 연방을 이루는 각 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이민지위의 고유의 측정 방법은 이주상태에 따른 SDGs 지표 세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에 이주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IOM에 따르면 국가 통계청 및 이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구축하여 센서스나 가구조사 등에서 이주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질문 모듈을 2018년까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IOM, 2017). 따라서 한국의 이주 통계 산출 기관들도 이와 같은 질문 모듈의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결정된 모듈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6. 결론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SDGs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각국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다. 이때 자료 수집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개념과 측정 방법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특히 모든 지표가 주요 특성별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요 변수의 분류 체계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승인조사의 핵심 항목 중 이주상태 항목의 질문 방법과 결과표 표준화 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승인조사에서 이주에 대한 질문은 이주정책 및 복지정책과 관련한 조사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오랜 동안 단일 민족 국가였다가 최근에는 이주민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국내 이주민 유입은 증가할 것이며, 이주 2세대의 성장을 통해 한국의 민족 및 인종 구성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응답자의 인종, 민족, 이주 상태 및 배경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변수의 항목 표준화가 절실하다.

분석 결과 이주 항목을 묻는 조사의 수가 적고 이주 항목이 포함되더라도 질문 방식, 응답범주 구성, 결과표 제시 방식 등에서의 표준화 정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표의 경우 질문의 방식, 질문에 사용되는 단어, 응답지의 제시 방식과 종류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통계 관련 기관이나 이주 관련 단체의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통계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 역시 형식이나 단어가 표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과정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대목은 조사별 특성과 시공간적인 제약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표준 질문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과표 제공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분류 기준안을 반영한 결과표 양식을 공유함으로써 조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주배경에 관한 질문이 가구 차원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응답자 개인의 이주배경보다 이주자가 해당 가구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는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이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혹은 지역사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배경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상태 항목의 조사를 일반조사로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항목은 대부분의 승인조사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장애나 이주상태와 같은 항목은 장애인이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조사에만 주로 포함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의 특성을 일반인 집단과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이주상태 항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모집단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SDGs 세분화와 관련한 조사 항목 혹은 변수가 한국의 승인통계에서 얼마나 표준화되어 질문되고 보고되는지를 파악하는 첫 단계의 작업으로서 실시되었다. 이주상태 항목에 대한 표준화 문제는 이 항목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이용 수요를 고려할 때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의 횡단적 비교나 현재와 미래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비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주 항목 표준화의 필요성은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비교 가능한 표준 질문지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주배경, 즉 자신 혹은 부모가 이주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뿐만 아니라 출신국가, 출생 당시 국적, 현재 국적, 인종, 민족 등 더 세분화된 질문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주상태 항목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각 항목이 가진 특수성을 깊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지침서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이주상태에 대한 문항은 질문, 응답, 보고 등의 과정에서 다른 항목들과는 다른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목적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주 관련 항목의 표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항목마다 별도의 심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이주상태 항목 표준화에 관한 논의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 이 연구는 이주 항목 표준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를 제공하기보다는 이후 연구를 위한 탐색적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수집되고 있는 자료들을 평가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30일 접수, 2018년 2월 20일 수정, 2018년 4월 10일 채택)

## 참고문헌

- 박영실, 박효민, 이영미, 김월화 (2017a).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 세분화와 항목 표준화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영실, 이영미, 김석호, 차은지 (2017b).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 18(3): 77-96.
- 박효민, 김석호, 이상림 (2016). 이주민 주거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5(2), 105-138
- 설동훈, 최홍엽, 한건수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
- 장준오 (2002).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원.
- 정기선, 김혜진 (2015). <이주민통계 국제비교 현황과 시사점>, IOM 이민정책연구원.
- 최영신, 강석진, 김미선, 김일수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법무부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ABS (2015). Standards for Country of Birth. www.abs.gov.au (2016.11.10. 접속)
- DIHR (2016). *Human Rights in Follow-up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raft Paper), (www.humanrights.dk).
- IAEG-SDGs (2016). *5th Meeting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IAEG-SDGs): Agenda Item 11 & 13. Data Disaggregation*.(IAEG-SDGs 5차 회의 자료).
- Fasel, N. (2016). *To disaggregate or not to disaggregate. Expert Group Meeting on Data Disaggregation* (NewYork, 2016. 6.27-29 ESA/STAT.AC.320/1)
- Fuerters, I. (2008). Towards Harmonization or Standardization in Governmental Accounting?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Experienc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10(4), 327-345.
- Hancioglu, A. (2016). "Leaving no one behind: from a statistical perspective" *Expert Group Meeting on Data Disaggregation* (New York, 2016. 6. 27-29 ESA/STAT.AC.320/1)
- IOM,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contex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IAEG-SDGs 6차 회의 자료).
- Lindquist, J. N. and Duck, J. M. (1982). "The Elderly Victim at Risk : Explaining the Fear-Victimization Paradox," *Criminology*, 20(1), 115-126.
- Granda, P. and Blasczyk, E. (2016). *Data harmonization, Guidelines for Best Practice in Cross-Cultural Surveys*. Ann Arbor, MI: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Retrived 9.13, 2017. from <http://www.ccsr.isr.umich.edu/>
- ONS, 2016, A-Z Quick Reference Guide to Harmonised Concepts and Questions for Government Social Surveys.

- <https://www.ons.gov.uk/ons/guide-method/harmonisation/harmonisation-programme/a-z-of-harmonised-standards.pdf> (2016.11.10. 접속).
- Richen, A. and Steinhorst, A. (2005). Standardization or Harmonization? You Need Both. *Business Process Trends* (November).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Highlights.
-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2017).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E/CN.3/2017/2).
- Victora, C. G. (2016). “Data Needs for Analyses of Inequalities: what we learned from the countdown to 2015” *Expert Group Meeting on Data Disaggregation*. (New York, 2016. 6.27-29 ESA/STAT.AC.320/1).

## Producing Disaggregated Data by Migration Status

Hyomin Park<sup>1)</sup> · Young Shil Park<sup>2)</sup> · Worlwha Kim<sup>3)</sup> · Youngmi Lee<sup>4)</sup>

### Abstract

Item standardization is indispensable for data disaggregation, which is used for evalu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hievement. In this study, we examined current status of item standardization of survey questions on immigrant status among certified surveys in Republic of Korea. In doing this, we analyzed the number of surveys including questions for migrant status, wording of the questions and response items, and the way to present the outcome tables. The results show that only few research has questions for migration status. In addition, the wording of question, response option, outcome table are not standardized well. Some suggestions for item standardization is discussed.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Data Disaggregation, Item Standardization, Migration Status, Migration Background

---

1) Researcher at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at KonKuk University. E-mail: Hyominp@gmail.com

2) (Corresponding author) Deputy Director at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E-mail: youngshil@korea.kr

3) Ph. D. candidate at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Sociology. E-mail: kimworlwha@hanmail.net

4) Assistant Director at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E-mail: lym0929@korea.kr